

김춘진 최고위원직 '빛 좋은 개살구'

〈더민주 도당위원장〉

“임기 6개월 불과 대선에 영향 못 끼쳐… 이춘석 의원 도당위원장 맡았다면 최고위원직 호선 없었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김제부안)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패배, 국회입성에 실패했지만 전북도당 정기대 의원 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또 순번제이지만 호남권을 대표하는 중앙당의 권역별 최고위원자리까지 올랐다. 일단 전북출신 도당위원장이 당 대표와 함께 정당의 최고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한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에서 힘을 잃는 등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섰다는 점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번 최고위원직 선임을 두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입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質)을 높이는 도내 정가 관계자들마다 선택이 다르다.

심지어 실익이 없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기를 놓고는 인식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6개월에 불과한 최고위원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직을 맡아도 임기기간인 오는 2017년 2월까지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두번째로 맡게될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에는 경선 룰을 정하는데 관여할



노조 뱃지를 달아주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콜렉 기타노동자 발언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한 노조원이 노조 뱃지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강성 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 콜트락기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노조에게 공개사과를 표명하라고 명령했다.

수 있고, 경선 룰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대선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시기의 최고위원직을 수행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현역 3선인 이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다면 최고위원직 호선은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더민주 서울시당위원장의 경우 3선인 김영주 의원이 최고위원직 2년 임기를 보장 받았다. 이춘석 의원이 도당 위원장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됐다면 호남권내부, 즉 전북 정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전북 의원 중 재산 가장 많아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이번 4.13 총선을 통해 제20대 국회로 입성한 전북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재산은 21억5,512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16억 9,808만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억4,055만원으로 10억원대 재산을 등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임실순창남원) 9억7,205만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9억2,631억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5억 9,2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갑선거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억4,608억원으로 전북 출신 신규 등록 의원 중 가장 적었다.

한편 이번에 신규 등록한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5명,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모두 7명이다. /신광영 기자

권은희, 모해위증 혐의 1심서 '무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환(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모해 목적으로 허위사실 증언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할 수 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의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 소신 있게 계속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인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수사경찰서 직원들이 수사에 철저하게 배제됐음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더민주, 추경협상 합의 관련 국민의당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및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에 관한 여야3당 합의와 관련, 국민의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면서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민주와 국민의당간 야권 공조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야권의 우당으로 남아 공조를 유지할 것인지 회색지대에 남아 새누리당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민주에 있던 시절 보좌관을 역임한 기 대변

인은 이날 박 위원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얕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느니 ‘추경합의를 이끌 어낸 것은 국민의당의 성과’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당을 압박하는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라며 “여당 대표도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가 국민의당에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야 하는 우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질문에도 참고 참았다”며 “그 보답이 새누리당과 공조해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추경만 끝나면 다인가. 세월호는 어쩔 것인가. 백남기 농민 사건, 어버이연합 사건은 어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야권공조를 허무는 것이 호남 민심인가. 되도록 없는 조정자 콤플렉스는 그만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최경환·안종범을 양보한 것은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어제 우리 국회는 다소 부족했지만 경제를 위해서 추경안과 청문회를 처리하고 특히 백남기 선생 살인 진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이렇게 합의한 양당 대표와 원내수석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더민주 내 비판 여론에 대해 “내가 돌맹이를 맞았다 했다”며 “국민을 위해 얼마

나 좋은 일이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에선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안한 발언도 일부 있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대우조건 지원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인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이 출석하지 않도록 막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을 가로막은 처사로 국민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장은 “이번 청문회 합의는 끝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속에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추궁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더민주 “새누리당과 공조 옳지 않아” 국민의당 “대승적 결단·비판 감수”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